

“통합만으론 부족... 노동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정책 토론회

권역별 산업 전략·노동자 직접 지원책 병행 필요 노동국 신설·예산 확대·생활인근 단일화 등 제안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 구조와 고용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산업 간·지역 간 노동 여건 차이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노동자 체험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노동권익센터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통합 이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정중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를 짚었다.

정 교수는 “전남과 광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각각 49.9%, 43.9%로 강원(52%)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해, 통합 특별시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안정적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노동국을 두고 3개 과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 미만(2021년 전체 예산 기준) 수준의 노동정책 예산을 매년 0.5%씩 증액해 5년 동안 4~5%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식 식당, 통근버스, 공동휴게실, 작업복 세탁소 등 인프라는 모든 산업단지별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중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가 지원, 돌봄·이동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 지역 노동정책의 과제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휴식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되, 정부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개선, 민간위탁사업 단기간 계약 금지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거나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모수환 한국노동연구원 부사무처장,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여해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모수환 사무처장은 “노동이 중심인 통합특별시를 그리다”란 주제로, 주요 산업 현황과 고용 구조, 기존 정책 한계를 설명했다.

광주는 자동차, 광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제조업 중심, 전남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이 주축으로, 고용 구조는 상호보완적인 반면, 제

조업 의존도가 높고 서비스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청년 유출 가속화, 농어촌 지역 초고령화와 고용 생태계에 한계가 드러났다.

모 사무처장은 “광주권은 AI·자동차·광산업 중심의 첨단 제조업 일자리 확충을,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농생명 바이오 산업 육성,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과 남부권(목포)은 관광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며 “4대 권역 균형 발전 전략의 성공은 권역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공정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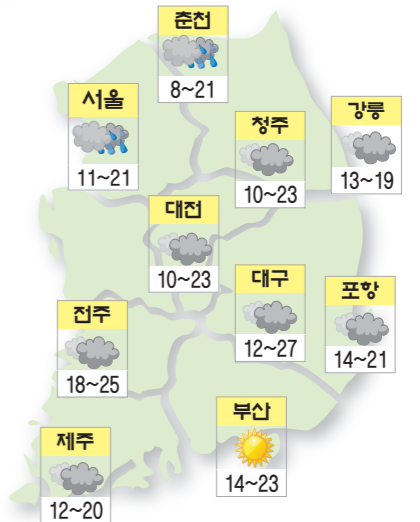
농수산업·도시 지역·고령화·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농업·어업·수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상담이 필요하고, 전국 평균 임금(376만원)보다 낮아 시군구 간 생활임금의 단일화가 시급하다”며 “일반 산업단지보다 더 영세하고 이주노동자·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전남 108개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 맑음 05:46 달맞이 15:04
☁️ 맑음 19:15 달맞이 03:19



광주	☀️	10~24
목포	☁️	10~20
여수	☀️	12~22
순천	☀️	8~25
구례	☀️	10~25
광주	☀️	7~22
신도	☀️	10~23
흑산도	☁️	11~19
진남	☀️	9~23
진도	☁️	8~19

목포	미물(고)	11:17 / 23:45
	샘물(저)	04:02 / 16:47
여수	미물(고)	06:21 / 18:54
	샘물(저)	12:38 / --:--

광주시·오월단체, 유튜브 전환길 고발 검토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유포...“명백한 거짓”

5·18 단체와 광주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브 전환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자문에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밝혀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 유포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에서 왜곡 보도한 신

문기사를 인용하며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아미아미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며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앞선 지난 23일에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인지 사실을 확인·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 개입설은 국가기관 조사에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앞둔 주민센터 24일 광주 서구 농성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용접 작업 ‘주의보’

최근 3년간 224건·16명 사상... 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10여명의 인명 피해와 18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타났다. 작업 중 틈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용접·절단 작업 화재는 총 224건(광주 30건·전남 19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77건(광주 8

건·전남 69건), 2024년 76건(광주 10건·전남 66건), 2025년 71건(광주 12건·전남 59건)으로, 매년 70건 안팎의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5명 등 총 16명에 달했다. 재산 피해는 총 18억4991만원으로, 2023년 5억3752만원, 2024년 10억4731만원, 2025년 2억6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용접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41분 보성군 문덕면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27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농막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8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 용접 작업 중 틈 불티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4일 광주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옛 전남 박물관 건물에서도 헬륨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27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지자 배치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작업 후 잔불 확인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 동구, 참여형 청년정책 강화

30일까지 청년참여위원 모집

광주 동구가 청년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구는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변화를 이끌어갈 ‘제6기 청년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위원들은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검토하며, 격월 회의와 분과 활동을 통해 정책 발굴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동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으로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전자우편(sth828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동구청 누리집 또는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23)에 확인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청년참여위원회는 청년의 아이디어가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창구다”며 “지역을 바꾸고 싶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전남대, 해수부 ‘수산양식 자동화·혁신연구센터’ 선정

김태호 교수팀, 2030년까지 44억 규모 디지털 양식 R&D 착수 스마트 수산양식 분야 디지털 전환 이끌 국내 핵심 거점 도약

전남대학교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핵심 과제인 ‘수산양식 자동화·혁신연구센터’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스마트 수산양식 분야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전남대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총 44억7000만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아 디지털 기반 수산양식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6일 밝

혔다. 연구는 전남대 김태호 교수(AI아쿠아팜연구소장) 팀이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사업을 총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양식 기술 구축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양식장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수온, 수질, 생육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전남대는 특히 육상 하이브리드 RAS(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자율운영형 스마트양식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식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자동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정은 전남대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7억원 규모로 수행한 ‘스마트 수산양식 연구센터’ 사업 성과가 기반이 됐다.

당시 사업은 최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연구 역량과 인력 양성 성과를 인정받았다.

실제 김태호 교수팀은 지난 7년간 석·박사를 포함한 24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SCIE급 논문과 기술이전 성과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기록해 스마트양식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센터는 경상국립대학교 등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컨소

시엄을 구성해 추진된다. 참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남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스마트 수산양식 분야 연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 양식 기술의 산업 현장 확산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장기간 축적된 국가 연구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인재를 동시에 확보해 국내 수산양식의 미래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